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전남 재생에너지 '탄력'

인허가 권한 일원화로 업무 간소화
도, 내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TF
정부 맞춰 행정 조직 개편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정치권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환경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및 기후 관련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콘트럴타워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 기준으로 3㎿ 이하는 각 지자체, 3㎿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 행위가 수반될 경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관계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지자제 자체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해당 기관들에 흩어진 인허가 권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련 업무도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남도 또한 해당 부처 신설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숙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화 상태인 전력계통 개선을 위한 송전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에너지 기본소득 등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에너지 분야 관련 건의 사항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부처 신설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남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는 등 전남을 '에너지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꾸릴 예정이다. 이를 위위해 도는 오는 10일 도청 서재필실서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각종 전남 현안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에너지기후부 신설에 대비해 행정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도 나서는 등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에너지산업국과 환경산림국 업무를 일부 조정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응하는 등 행정 조직 개편안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정부 방침을 지켜보며 맞춤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 시내버스 노조, 오늘 첫 차부터 파업 재개

2400명 중 1400명 파업 동참
장기화 조짐에 교통 불편 우려
운행률 70%대 비상수송 가동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9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을 재개한다.

앞서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일 사측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결렬을 이유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에 협상안을 요구하며 현충일 연휴(6~8) 3일간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법 운행을 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다만 노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정년 61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마다 불어나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2년 전국 최초로 시급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부터 적자 규모가 확대되다 지난해에는 1422억원의 적자를 광주시가 보존했다.

노조가 9일 무기한 전면파업 재개를 예고하면서 광주지역 버스 운행 차질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전체 시내버스 기사 2400여명 중 1400명이다.

다만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 절차에는 동의해 향후 중재를 통한 협상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의 파업은 지난 2014년 6월 광주 시내버스 583대가 멈춘 뒤 11년 만이다.

광주시는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비노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 전 대비 7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계획을 가동한다.

광주시는 파업에 들어가도 전체 운전원 2400여명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 1020여명(42%)은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평상 시 운행 중인 버스 1000대 중 700대(70%)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파업 장기화로 운전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대수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임차버스 등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파업 기간 중 시내버스 운행 대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노선별 이용 인원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시간표를 조정하고 도시철도와 택시 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김영록, 제11회 전남사회복지사대회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5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전남사회복지사대회'에서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주당, 약속 정치 화답'

➡1면서 계속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감사합니다' 피켓을 들고 동구 산수오거리, 문화전당, 푸른길 등을 돌며 직접 인사를 전했다.

그는 "탑차 타고 마이크 잡았던 걸 기억하는 시민들이 '축하한다'고 손을 많이 흔들어주셨다"며 "군공항 이전, AI 집적단지, 공공의대 설립 등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민 영광군의원은 원불교 교당 등 각종 모임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그는 "전남에서 정권 교체에 많은 힘을 실어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 의원으로서 풍력 신재생 에너지 메카를 비롯, 영광 기본 소득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점순(69)씨는 "지난 대선에는 선거 끝나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번엔 정치인들이 먼저 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니 진심이 느껴졌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 경제 정상화가 1번인데, 재난지원금·지역화폐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야 나라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영광군 공무원 정남현(36)씨는 "아직 행정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빠른 내각 인선과 안정된 모습에서 변화가 느껴진다"며 "호남에 약속한 공약들이 말 뿐이 아닌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이러한 행보를 정치권의 긍정적 자세 변화로 해석했다.

민주당 영광지역위 관계자는 "대선 기간 민주당이 경청노트를 들고 골목 곳곳을 누볐다. 이를 확대해 '경청위원회(가제)' 설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전남에서 얻은 압도적 지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다. '호남 소외'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매년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 바친 이의 충성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사진설명 : 전쟁기념관 6·25 조형물 호국군상)

"우리에게는 선열들이 남기신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을 잊지말고 살아갑시다."

송하전업사 대표 박 영 동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8-1(산정동1341-1) 전화 : 061-276-3721 전송 : 061-245-0599, 061-245-0548